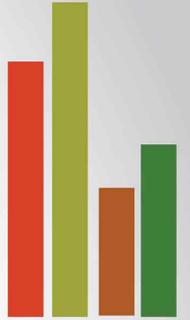


여론조사와 민심의 괴리, 신뢰 위기의 여론조사



- ◆ 일 시 | 10월 1일(화) 오전 10시
- ◆ 장 소 | 종로빌딩 3층 (종로구 인사동길 5길 42)
- ◆ 주 최 | 미디어연대, 바른사회



순서

■ 사회

-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前 건국대 교수)

■ 기조 발제

- 이 용 구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 / 前 중앙대 총장)

■ 발제

- 서요한 (여론조사공정(주) 대표)
-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 동국대 객원교수)

■ 종합토론

■ 폐회

목 차

■ 기 조 발 제

여론조사의 신뢰성 검증:

표본의 대표성, 설문 문항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 분석 ... 9

- 이 용 구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 / 前 중앙대 총장)

■ 발 제

같은 목적, 자른 조사 결과, 진짜 이유는 27

- 서 요 한 (여론조사공정(주) 대표)

공영매체 여론조사의 부적절성과 정치적 편향성 44

- 이 석 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 동국대 객원교수)

■ 정책토론회

기조 발제

■ 이 용 구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

**여론조사의 신뢰성 검증:
표본의 대표성, 설문 문항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 분석**

이 용 구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교수 / 前 중앙대 총장

1. 들어가며

여론조사는 유권자(대상) 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어떤 이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이러한 여론조사에서 여론이란 바람과 같다. 즉 우리는 바람의 실체는 볼 수 없으나 피부로 느끼거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여론도 존재한다는 것은 느낄 수는 있으나 그 실체는 알 수 없다. 또한 여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게 되나 발표된 결과들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여론조사는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여론의 실체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도 또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특히 선거 여론조사가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일정한 형식적인 절차와 조사 과정에 대한 규정을 정할 뿐이다. 여러 기관들에서 무책임한 여론조사가 난무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여론조사 결과만 신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정책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참으로 여론조사의 맹신 내지는 오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는 조사과정의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의 평가에 의하여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표본의 대표성과 설문문항의 공정성이다. 표본의 대표성 관련하여서는 표본의 절대적인 숫자는 적절한가? 그리고 낮은 응답율(5~15%)에 따른 표본의 편향성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85~95% 정도의 응답 거부자들은 왜 응답거부를 하는가? 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설문 문항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여론 조사에서 설문 문항의 공정성 문제는 없는가? 설문 문항의 편향성은 없는가? 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왜 조사기관마다 조사결과가 다른가? 정말로 유권자들은 성실하게 응답하나? 에 대하여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가능함으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전개 과정

우리나라 (선거)여론조사의 출발점은 1987년도 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갤럽이 선거일 오후 6시 선거 종료와 함께 각 후보별 예상득표율을 발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1-1]에 후보자 별 갤럽 예측치와 실제 득표율이 주어져 있는데, 갤럽이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제 13대 대선 한국갤럽 예상득표율과 선거결과(%)

후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예상득표율(%)	35	28	28	8
실제득표율(%)	37	28	27	8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관련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여론조사가 유행이 되었으며 여론조사 기관들도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는데, 정치관련 여론조사를 매주 발표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 갤럽과 리얼미터 라고 할 수 있다. 두 조사 기관은 모두 전화조사를 실시하는데, 표본은 대략 1000명을 기준으로 하며, 표본은 RDD(Random Digital Dialing)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조사 방법으로는 한국 갤럽의 경우 면접원 면접 조사로 실시하는데 조사 대상자의 15%는 유선전화 85%는 무선전화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다. 리얼미터의 경우 20%는 유선전화 ARS(자동응답), 70%는 무선전화 ARS(자동응답), 그리고 10%는 무선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정리에서는 각 지역별 성별, 연령 구조에 따른 비율 조정을 하여 발표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여론조사 기관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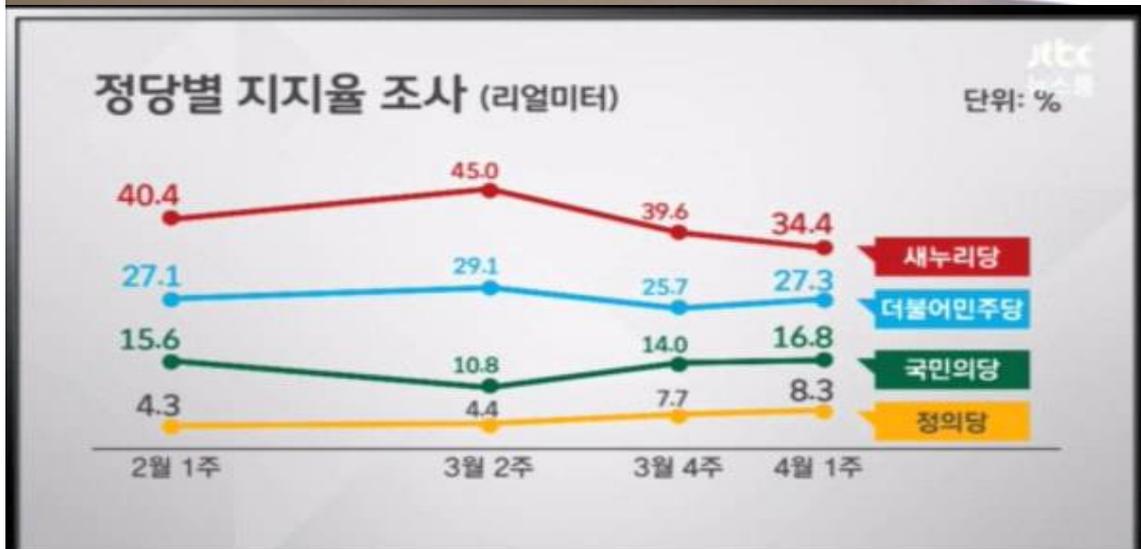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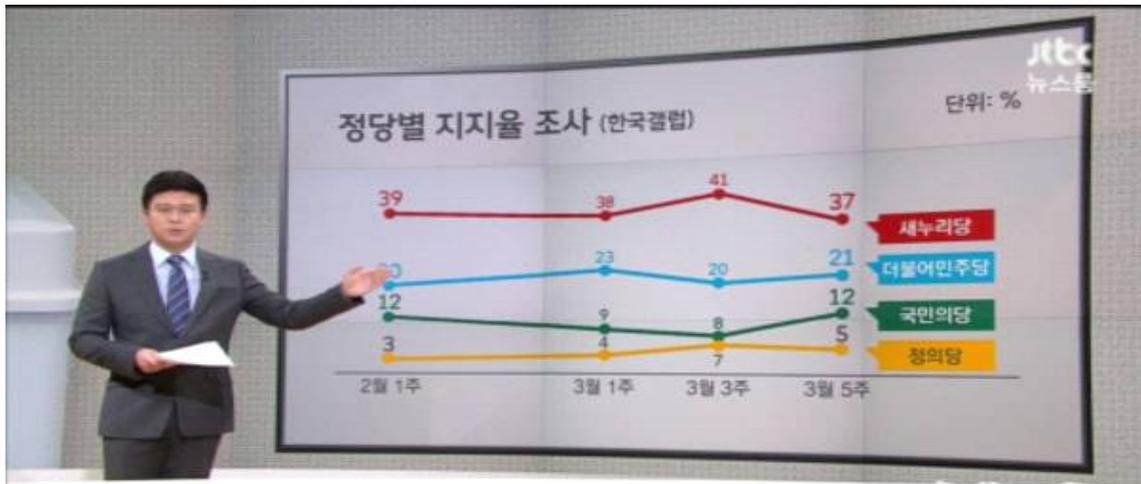
3. 여론조사의 신뢰성 평가

요즘은 거의 매일같이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홍수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아주 간단한 예를 통하여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매주 각 정당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9월 27일 발표 한국갤럽의 경우(17-19일 조사, 1,000명, 응답률 17%, 95% 신뢰수준하에서 최대허용오차는 +-3.1%)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38%, 한국당은 24% 이었다. 9월 23일 발표 리얼미터 조사(16-20일 조사, 3,010명, 응답률 6.6%, 95% 신뢰수준하에서 최대허용오차는 +-1.8%)에서는 민주당 38.1%, 한국당 32.5% 이었다. 두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차는 0.1%이었으나,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 차이는 8.5% 이었다. 이 차이의 의미가 무엇인가? 95% 신뢰수준하 에서 최대 허용오차 한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느 한 시점에서 특정 정당 지지율은 하나의 특정값(이를 테면 P)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95% 신뢰수준하에서 최대 허용오차를 고려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 대한 두 여론조사 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2016년도 1월 26-28일 조사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003명 조사 응답률 18.3%, 유선 15% 무선 85%),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39%, 더불어민주당 20%, 국민의당 12% 정의당 3%, 없음/무응답 25%이었다. 그리고 2016년도 1월 28-29일 조사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1,008명 조사, 응답률 5.9%)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37.8%, 더불어민주당 30.4%, 국민의당 13.7%, 정의당 2.6%, 모름/무응답 13.8% 등과 같이 조사되었다. 즉, 2016년도와 2019년도의 여론조사 결과는 두 조사기관 모두 유사한 결과이다. 다만 두 정당이 뒤바뀌었을 뿐이다. 왜 그럴까?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 최악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종로구 여론조사 이었다.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45.8%, 정세균후보 28.5%(오 +17.3%) 이었으나 선거결과 정세균 52.6%, 오세훈 39.7%(정 + 12.9%)로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결과 차이 30.2% 에 달하였다. 뉴스타파 선거여론조사 심층분석보도(2017년 4월 20일보도)에 의하면, 2014년 지방선거 - 2016년 총선까지의 선거예측여론조사 분석을 한 결과 대상 선거여론조사 1,557건 에 의할 때, 조사오차(여론조사지지율 - 선거득표율)가 평균 9.6% 이었고, 전체중에서 36%의 조사는 당선자를 맞추지 못하였다.

2016년도 4.13 총선에서 민주당 일부가 국민의당으로 분열되면서 새누리당이 180석, 많으면 208석까지 확보하리라고 예측하고, 더불어민주당은 80석 정도밖에 당선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새누리당의 극심한 공천파동 이후인 선거 3일전 4월 10일 보도에서도 4개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새누리당은 163-165석, 민주당의 경우 88-100 석으로, 그리고 국민의당은 25-32석 정도로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 4월 8일 총선 D-5일에 JTBC 뉴스룸에서 4월 6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를 토대로 20대 총선 결과 예상 의석수는 새누리당 170석, 더불어민주당 80석, 국민의당 20-30석, 정의당 5-10석 등과 같이 예측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 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과 같았다. 당시 JTBS 뉴스룸에서 보도한 정당별 지지율(한국갤럽/리얼미터)와 전국 예상의석수 는 아래 그림과 같다.



2016년도 5월 27일 KBS 보도에서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 대해 “고장난 풍향계처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말했다. 김용희 사무총장은 오

여론조사와 민심의 괴리, 신뢰 위기의 여론조사

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여론조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일부 후보자의 여론조작에 악용되기도 하고, 부정확한 예측 보도로 언론 보도의 신뢰성에도 흠집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의 꽃인 선거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잘못된 예측을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4. 표본의 대표성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 43백만 유권자들 중에서 대략 1,000명 정도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전화조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응답률이 면접조사의 경우 대략 15% 내외이고, ARS(자동응답)의 경우 5% 내외이다. 즉 전화 통화가 된 사람들 중에서 85-95% 유권자들은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응답 거부가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랜덤하게 이루어지면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응답거부를 더 많이 한다면 이러한 여론조사는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응답 거부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집권당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야당 성향 사람들은 보다 소극적으로 응답하는 성향이 있다.(위에 제시한 2016년도와 2019년도 한국당(새누리당)과 민주당 지지율 비교).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표본의 편향성 여부를 참고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는데, 요즘 조사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였는가를 묻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과정을 분석해 보니 리얼미터에서는 모든 정당 지지도 조사 과정에서 지난 19대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 결과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이에 대한 발표를 한 사례가 있어 이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정당 지지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4-1]에는 문재인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으로 한겨레신문 의뢰로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이에 의할 때 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64.9% 이었고, 홍준표후보 13.1%, 안철수후보 9.8% 로 조사 되었다. 그런데 실제 선거에서 득표율은 문재인 41.1%, 홍준표 24.0% 안철수 21.4% 이었다. 즉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23.8% 정도 과다 응답하였고, 홍준표와 안철수 지지자들은 각각 10.9% 와 11.6% 정도 과소 응답하였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이러한 응답 편향성을 보정하여야 한다. [표4-2]에는 9월 초에 SBS에서 칸타코리아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가 주어져 있다. 이 조사에서도 지난 19대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를 조사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투표를 한 응답자 중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였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비율이 59.4% 이었고, 홍준표 19% 안철수 12% 등과 같이 문재인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이 과대하게 응답하였다. 여론조사 결과의 정리에는 이를 반영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표 4-1] 대통령취임 2주년 여론조사

대통령취임 2주년 여론조사-한겨레신문의뢰 한국리서치조사 (5.2-3 조사).
유선면접 16.7%, 무선면접 83.3%, 전체응답률 14.0%

여론조사 응답과 지난 19대 대선 투표 현황					
후보	응답자수	응답율(%)	19 대대선득표율	차이	득표율대비 비응답률
문재인	537.0	64.9	41.1	23.8	1.6
홍준표	108.0	13.1	24.0	(10.9)	0.5
안철수	81.0	9.8	21.4	(11.6)	0.5
유승민	38.0	4.6	6.8	(2.2)	0.7
심상정	45.0	5.4	6.2	(0.8)	0.9
기타후보	18.0	1.0			
투표참가	827.0	82.7	77.2	5.5	
비투표/안함/모름	173.0	17.3	22.8	(5.5)	
전체	1,000.0	100.0			

문재인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응답수	인구비례수정비율(%)
긍정평가		514.0	51.6
부정평가		448.0	44.6
모름/무응답		38.0	3.7

지지정당				
		응답수	인구비례수정비율(%)	득표율대비 수정(%)
더불어민주당		366.0	37.2	23.6
자유한국당		184.0	18.0	33.0
바른미래당		59.0	5.4	11.8
민주평화당		8.0	8.0	11.8
정의당		112.0	11.2	12.9
기타정당		17.0	1.7	
없음/모름		254.0	25.4	

[표4-2] SBS 2019 한가위 특집 여론조사

SBS 2019 한가위 특집 여론조사 9.9-11 칸타코리아 조사			
1,026 명 조사. 유선전화면접	20.4%	무선전화면접	79.6%
전체응답률 11.1%			

후보	응답자수	응답율(%)	19 대 대선 득표율	차이	득표율 대비 응답률
문재인	504.0	59.4	41.1	18.3	1.4
홍준표	161.0	19.0	24.0	(5.0)	0.8
안철수	102.0	12.0	21.4	(9.4)	0.6
유승민	46.0	5.4	6.8	(1.4)	0.8
심상정	27.0	3.2	6.2	(3.0)	0.5
기타 후보	8.0	1.0			
투표참가	848.0	82.7	77.2	5.5	
비투표/안함/모름	178.0	17.3	22.8	(5.5)	
전체	1,026.0	100.0			

	응답수	인구비례수정비율(%)
긍정평가	457.0	45.1
부정평가	533.0	51.6
모름/무응답	36.0	3.3

	응답수	인구비례수정비율(%)	득표율 대비 수정(%)
더불어민주당	322.0	31.3	21.7
자유한국당	205.0	18.8	23.7
바른미래당	41.0	4.1	7.3
민주평화당	5.0	0.4	0.5
정의당	67.0	6.3	12.2
기타정당	7.0	0.6	
없음/모름	379.0	38.5	

	응답수	인구비례수정비율(%)
찬성	433.0	43.1
반대	552.0	53.0
모름/무응답	41.0	3.8

표본의 대표성에서 또다른 고려 사항은 절대적인 표본의 수 문제이다. 여론조사에서는 표본추출시에 8(권역)X5(연령세대)X2(성별) = 80 개의 구간에 대하여 구간 유권자 인구비례 할당 추출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특정 집단이 과소 추출되거나 과대 추출된 경우 해당 구간의 인구비례로 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비례배율 조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단위 조사에서는 80개 구간 비례율을 고려하기 위하여 최소한 1000 명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기준”에서도 제4조 6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⑥ 누구든지 과도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2.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시·도 단위 조사 : 800명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 : 500명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즉 전국단위 조사에서는 최소 1,0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하여 가장 활발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리얼미터의 경우, 대부분의 정치 현안에 대하여서 500명의 표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할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에서는 그 결과를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검찰총장 임명,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된 여러 조사와 과거 지소미아 파기, 소득주도성장, 이미선 헌법재판관후보자, 패스트트랙관련,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등 수많은 정치·사회 관련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500명을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서는 이를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단위조사에서 1,000 명 미만의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는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공인되지 않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전체 유권자의 여론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가? [표4-3]에는 중앙일보가 9월 24-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00명 조사시에 각 지역별/성별/유권자수를 반영한 비례할당 표본수가 주어져 있다. (무선전화 면접 82.3%, 유선전화면접 17.7%, 전체 응답률 12.1%)

[표 4-3] 중앙일보 여론조사 응답자 분포와 표본 할당 수

조사완료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완료 사례수	남자	여자	목표할당 사례수	남자	여자
권역별	합계		1000	540	460	1000	497	503
	계							
		19~29세	172	98	74	173	92	81
		30대	157	104	53	166	85	81
		40대	188	117	71	194	98	96
		50대	211	101	110	200	101	99
		60세 이상	272	120	152	267	121	146
권역별	서울	소계	202	111	91	191	93	98
		19~29세	41	23	18	36	18	18
		30대	41	23	18	35	18	17
		40대	38	24	14	36	18	18
		50대	36	21	15	35	17	18
		60세 이상	46	20	26	49	22	27
	인천/경기	소계	289	156	133	307	153	154
		19~29세	55	30	25	55	29	26
		30대	50	35	15	55	28	27
		40대	62	40	22	64	32	32
		50대	55	25	30	63	32	31
		60세 이상	67	26	41	70	32	38
	대전/세종/충청	소계	99	60	39	106	54	52
		19~29세	15	9	6	18	10	8
		30대	21	15	6	17	9	8
		40대	21	13	8	21	11	10
		50대	20	10	10	21	11	10
		60세 이상	22	13	9	29	13	16
	광주/전라	소계	98	41	57	99	49	50
		19~29세	15	8	7	16	9	7
		30대	12	5	7	14	7	7
		40대	17	7	10	18	9	9
		50대	21	13	8	20	10	10
		60세 이상	33	8	25	31	14	17
	대구/경북	소계	108	66	42	100	50	50
		19~29세	13	11	2	16	9	7
		30대	10	7	3	15	8	7
		40대	19	15	4	18	9	9
		50대	30	13	17	20	10	10
		60세 이상	36	20	16	31	14	17
	부산/울산/경남	소계	165	84	81	154	76	78
		19~29세	25	10	15	25	13	12
		30대	20	17	3	24	12	12
		40대	28	15	13	29	15	14
		50대	36	16	20	32	16	16
		60세 이상	56	26	30	44	20	24
	강원/제주	소계	39	22	17	43	22	21
		19~29세	8	7	1	7	4	3
		30대	3	2	1	6	3	3
		40대	3	3	0	8	4	4
		50대	13	3	10	9	5	4
		60세 이상	12	7	5	13	6	7

5. 설문 문항의 공정성

여론조사에서 설문 문항이 편향된 질문을 하거나 어떤 항목의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되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여론조사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실시된 “소득주도성장” 관련하여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500명, 응답률 6.2%, 표

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 에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3. 최근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의료.주거.교육.통신 등 가계지출 경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영세 상공인 지원 *아동수당.기초연금.치매국가 책임제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성장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기본방향유지(효과 미흡하나 겨우 1년 지남) ⇒ 55.9%
- 2) 전면폐지(부작용 크고 앞으로도 효과 없을 것) ⇒ 33.4%
- 3) 모름/무응답 ⇒ 10.7%

위 설문 문항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관련하여 엠브레인이 2019년 1월 29-30 조사에서는 (최종 응답 1005명, 응답률 8.2% 유선 29.2% 무선 70.8% 전화면접)

소득주도성장 기초 질문

- 1) 수정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 ⇒ 57%
- 2) 일관성을 갖고 계속 추진해야한다 ⇒ 39.7%

와 같이 조사되었다

특히 리얼미터 여론조사 관련하여 설문문항의 편향성에대한 논란이 많은데, 닉네임 일산 간지남이라는 분이 네이버블로그에 올린 글을 첨부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질문을 읽어보니…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 헷갈린다!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왜곡된 질문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지지율 격차가 1주일 사이에 10%포인트 넘게 바뀐 것이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흘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결과들이 여러 논란을 낳았다.

그런데 20일 전교조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니,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 수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외노조 관련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52.9%가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했다고 한다. 전교조를 신뢰한다는 응답도 54.5%로 나왔다.

문제는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이였다. 합법화 찬반을 묻는 질문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법외노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

설명도 없다. 오히려 법 위반 사실은 빼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앞세워 합법화 지지를 유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전교조에 대한 신뢰도 조사는 더 어이없었다. ‘지난 30년간 참교육을 목표로 촌지 근절, 체벌 금지, 국정교과서 반대 등의 활동을 해 온 전교조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은 질문자가 답을 정해주는 식이다.

리얼미터가 과거 진행한 다른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여러 언론사들이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의 질문지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하는 언론매체들이 거의 정해져 있었는데, tbs, YTN, CBS, 오마이뉴스 등이다. 이들 매체가 어떤 성향을 갖는지는 잘 알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보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매체에 의해서도 인용 보도되어 마치 ‘국민의 여론은 이런 것이다’라는 여론 선동으로 이어지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를 근거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곤 한다. 사흘만에 여론이 우호적으로 변했다는 리얼미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전격 임명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부정적 여론이 압도했던 1차 조사 때와 부정적 여론이 간발의 차이로 앞선 2차 조사 때의 질문이 달랐다.

12일 조사에서는 “최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물었다. 이때는 부적격 응답이 54.6%로 적격 응답 28.8%에 비해 압도적으로 앞섰다. 그러나 17일 조사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물었다. 임명 반대 응답이 44.2%로 임명 찬성 응답 43.3%에 비해 소폭 높게 나왔을 뿐이다.

2차 조사의 질문은 불필요하게 장황하다. 문 대통령을 두 차례 등장시켜 문 대통령 지지자의 호응을 유도하려다 보니 장황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국회 청문회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볼 작정이었다면 질문을 통일시켰어야 한다. 여론조사 회사가 질문을 바꾸고도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논란을 예상하고도 질문을 바꾼 것이라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리얼미터의 이런 다분히 의도적인 설문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친정부 성향의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현안에

관한 것이었는데, 질문지를 들여다보니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왜곡된 질문이 상당수였다. 사례를 정리해보았다.

<사례 1 : 에너지 전환 정책>

다음은 에너지 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두 에너지 정책 방향 중에서 어느 것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십니까?

1. 국민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56.4%)
2. 원전 축소가 오히려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32.4%)
3. 잘 모르겠다 (모름 / 무응답 : 11.2%)

▶ 1번 선택문항 자체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안전과 환경’을 위한 결정임을 전제하고 있고, 태양광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2번 문항에서는 원전 축소가 가져오는 환경 문제와 국민 부담이 막연할 뿐이다. 원전 반대론자들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질문지가 아닐 수 없다.

<사례 2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찬반 조사>

최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수사가 국가 권력의 방해와 은폐로 인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실패했으므로, 특별수사단의 설치와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질문에는 ‘특별수사단’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측의 주장, 즉 ‘국가 권력의 방해와 은폐로 책임자 처벌에 실패’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주장만 담고 있고, 설치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전혀 담겨있지 못하다. 당연히 ‘찬성’을 유도하는 조사일 뿐이다.

<사례 3 :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몸싸움 책임>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7년 만에 이른바 ‘동물국회’가 재현됐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1.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추진
2.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행사

3.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
4. 여야 공동 책임
5. 기타
6. 잘 모르겠다

▶ 질문 자체가 국회에서 일어난 ‘충돌’, ‘몸싸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문에서부터 ‘격렬한 충돌’, ‘동물국회’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사태의 배경보다는 ‘충돌’이라는 행위에 집중하게 만든다. 당연히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도 불사한 ‘자유한국당’에 더 큰 책임을 돌리게 만드는 유도성 여론조사다.

<사례 4 :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찬반>

항일 독립투쟁을 주도한 약산 김원봉은 해방 이후 북한의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에게 주는 훈장이나 포장의 서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최근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항일 독립투쟁의 공적이 뚜렷하므로 찬성한다.
2. 북한 정권에 기여했으므로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 이 문제가 여론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일까? ‘암살’등 여러 유명 영화를 통해 이미 ‘김원봉=영웅’의 이미지가 각인된 대중에게 이 문제는 ‘물어보나 마나’한 것이다. 그들에게 겨우 ‘북한의 고위직을 지냈다’는 사실은 반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대중이 아닌 역사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야 할 내용이다. 또한 질문에 ‘6.25 남침을 계획했다’, ‘남파간첩을 보낸 북한 지도부’ 등의 정보 제공이 함께 있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사례 5 :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찬반>

최근 장관 후보자 일곱 명 중 두 명이 지명 철회되거나 자진 사퇴했고, 국회는 일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사흘 후인 8일에는 임명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장관의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찬성한다.
2.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 청와대의 입장을 지원해주기 위한 의도된 설문일 뿐이다. 질문 서두에서부터 이미 장관 후보자 두 명이 지명철회 및 사퇴했다는 배경 설명이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가 반대하는 이유인 장관후보자들의 위장전입, 거짓말 등 결격사유를 언급하는 대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함으로써, 임명 반대 논리를 흐리고 있다. 선택문항 1번에서도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라고 해, 청와대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인식을 강요한다. 2번도 ‘장관으로 임명하기에 결격사유가 많으므로 임명을 반대한다’로 했어야 할 것이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 여론조사 기관이 ‘공정성’보다는 의뢰자가 원하는, 즉 의뢰자 입맛에 맞는 조사에 충실한 기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의뢰자 대부분은 좌파성향, 그리고 친정부 성향이다.

게다가 탈원전, 김원봉 서훈 문제 등 전문가조차 일도양단(一刀兩斷)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즉 여론조사에 부적합한 분야까지 마구잡이로 조사하는 과감성까지 갖췄다. 이쯤 되면 여론조사에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여론조작’을 작정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출처]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질문을 읽어보니...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 헷갈린다! |작성자 일산간지남

6. 맺음말

여론조사는 표본조사의 한 방법으로 표본조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서 만이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는 설문구성, 표본추출, 조사과정, 조사방법, 발표 내용 등 공정한 여론조사의 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정하여 여론조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할 표본조사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는, 즉 대상집단 전체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일부 국민들의 의견을 탐색하는 불완전한 조사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조사 기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본추출과정이나 설문 구성, 그리고 결과 발표 등에서 왜곡된 방법을 활용할 개연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중앙일보에서는 9월 23-24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결과가 긍정평가 37.9%, 부정평가 52.1%, 모름/무응답 10.0% 등과같이 조사되었으나, 이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37.1% 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중앙일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보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에 있어서도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인 발표를 하는 경우도 여론 조사 왜곡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아직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의 추세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어느 시점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대표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간단한 참고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마치 전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것처럼 주요 언론(방송/신문 등)과 정당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남용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며, 자기들 정책들을 합리화하는데 소위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정책토론회

발 제

■ 서요한 여론조사공정(주) 대표

■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같은 목적, 다른 조사 결과, 진짜 이유는?

서요한
여론조사공정(주) 대표

1. 질문이 대답을 유도하는가?

이끌고 싶은 결론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들이 종종 있다. 어떤 질문들은 조사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를 특정한 방향의 결론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자가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러한 질문을 “질문에 부하(load)가 걸린”, 또는 “결론으로 이끄는 질문(leading question)”이라고 한다. 이런 질문들의 특징은 같은 조사 주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조사 설문지이든지 ‘질문에 부하(load)가 걸린’ 내지는 ‘결론으로 이끄는 질문(leading question)’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대답은 ‘아니오’이다. 어떤 질문이라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든지 질문자의 편견 또는 편향(bias)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첫 번째 집단에는 “그 영화는 얼마나 길었습니까?” 라고 묻고, 두 번째 집단에는 “그 영화는 얼마나 짧았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결과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한 응답자의 평균 응답 시간은 130분이었고, 두 번째 집단의 응답은 100분으로 나타났다.

질문	응답자 평균 시간
그 영화는 얼마나 길었습니까?	130분
그 영화는 얼마나 짧았습니까?	10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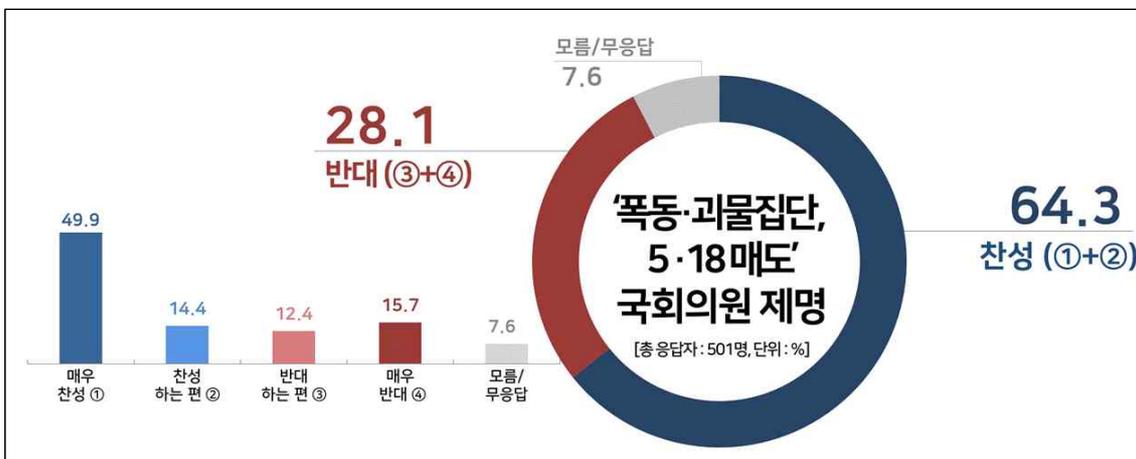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배경에는 전자의 질문이 영화가 길었다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반면에 후자의 질문은 짧았다는 점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그 영화는 몇 분 동안 상영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여야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2019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개의 매체(오마이뉴스, TBS, CBS) 순차적으로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인 R사에 의뢰한 5.18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특정방향으로 결론을 이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먼저 2019.2.12. 오마이뉴스가 5.18관련하여 'R'사에 의뢰한 질문을 보면, “최근 여야4당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매도한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들 의원들을 제명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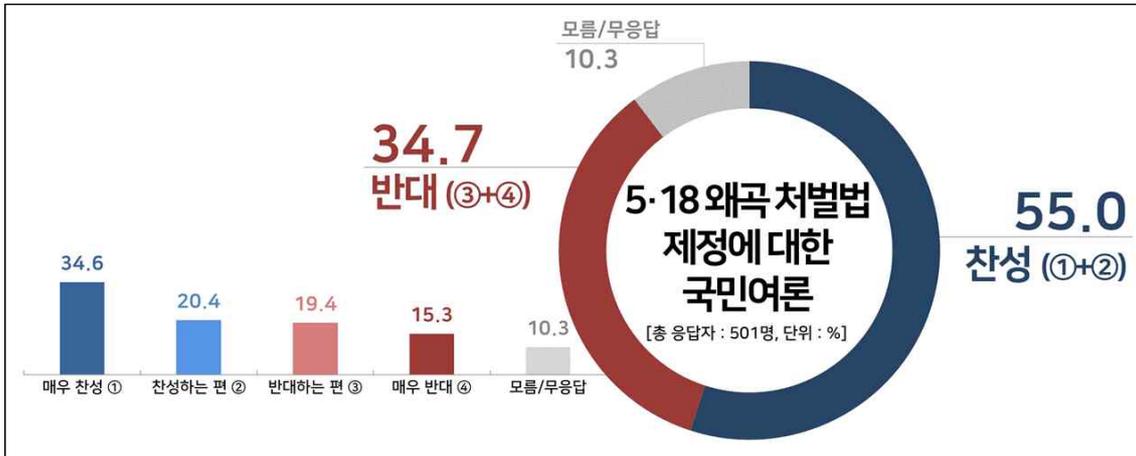
어떤 이슈이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위의 질문을 보면 이미 질문자가 이슈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버린 후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정적인 단어인 '매도'를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미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019.2.12.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R'사가 조사한 표본 501명의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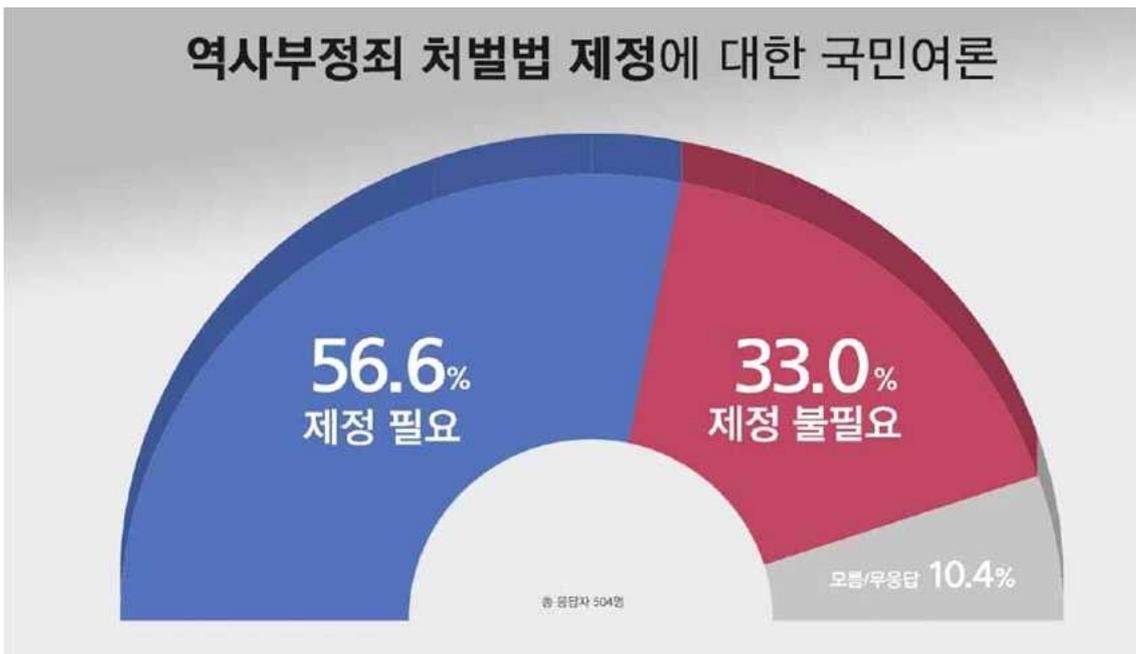
2) 다음 날인 2019.2.13.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TBS)이 5.18왜곡처벌법 관련 'R'사에 의뢰한 질문을 보면,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유가족을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5·18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였다.

질문의 내용이 전날에 비해 길어지면서 부정적 단어인 '왜곡', '날조', '비방 행위'라는 단어가 추가로 나열되었다.



▶ 2019.2.13. 교통방송(TBS)의 의뢰로 'R'사가 조사한 표본 501명의 조사 결과

3) 세 번째로 2019.2.15. 기독교방송(CBS)이 5.18관련 '역사부정죄 처벌법'제정에 대하여 'R'사에 의뢰한 질문을 보면, “최근 5.18 망언의 파문이 점차 확산되면서, 사실로 확인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방안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을 벌하는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역사부정죄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역사부정죄처벌법'을 만드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질문 역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언급함으로써 일정방향으로 답변을 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9.2.15. 기독교방송(CBS)의 의뢰로 'R'사가 조사한 표본 504명의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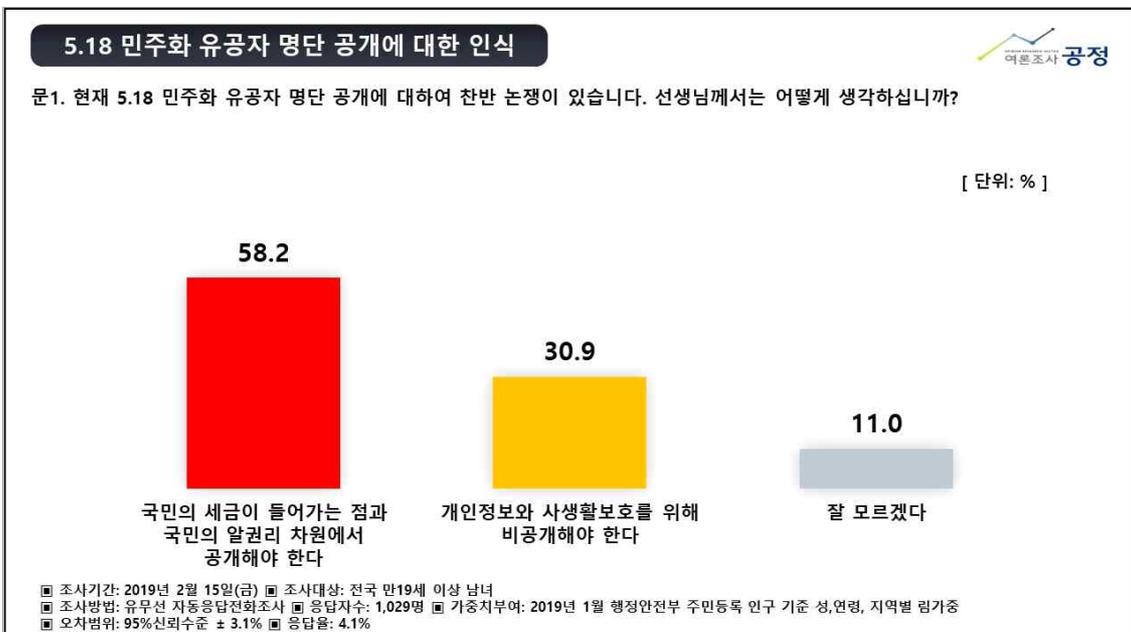
세 언론사가 한 조사기관에 순차적으로 의뢰하여 조사한 것을 비교해보면, 질문의 내용을 약간씩만 수정했을 뿐 5.18이라는 같은 이슈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금방알 수

있다.

타 언론사가 이미 조사한 이슈에 대하여 동일기관에 동일한(유사한) 질문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언론사는 거의 없다. 세 언론사가 직접 질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조사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질문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뢰기간이 작성한 질문지이든 조사기관이 작성한 질문지이든 이미 질문에서 ‘편향(bias)’이 발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여론조사공정은 당시 이슈에 대하여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당시 논란이 된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각각 나누어서 질문하였다.

① 2019.2.15일 10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첫 번째 질문에서 "현재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하여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간결하게 물었다. ‘공개 찬성’이 58.2%, ‘공개 반대’가 30.9%, ‘잘 모르겠다’가 11%로 조사되었다.



② 두 번째 질문에서는 “선생님께서 5.18민주화 유공자 선정 사유 즉, 공적도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역시 간결하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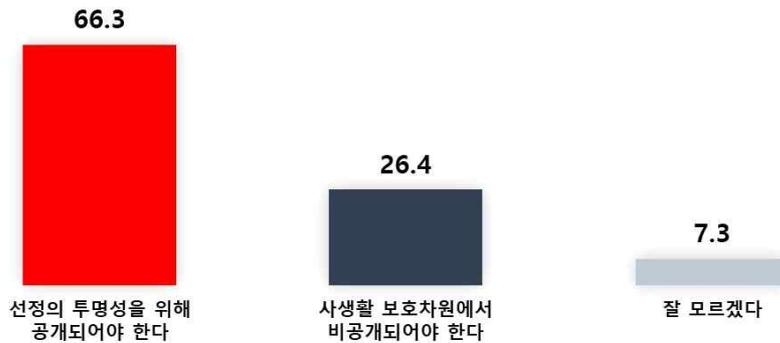
‘공개 찬성’이 66.3%, ‘공개 반대’가 26.4%, ‘잘 모르겠다’가 7.3%로 조사되었다.

5.18 민주화 유공자 선정 사유 공개에 대한 인식



문2. 선생님께서는 5.18 민주화 유공자 선정 사유 즉, 공적도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조사기간: 2019년 2월 15일(금) 조사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유무선 자동응답전화조사 응답자수: 1,029명 가중치부여: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 지역별 리가중
 오차범위: 95%신뢰수준 ± 3.1% 응답률: 4.1%

5) 위의 사례는 다른 한편으로 단어의 상동효과 또는 고정관념효과(stereotypes)가 작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질문에 등장하는 특정한 단어에 대한 응답자의 선입견이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동효과 또는 고정관념효과(stereotypes)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 고정관념과, “죄”에 대한 거부적 반응 등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응답자들이 특정 조직의 이름이나 정당의 이름, 개인의 이름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만일 그런 이름을 질문 속에 포함시킨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조사 주제에 대해서 응답하기보다는 그 이름에 대해서 반응을 하여, “무조건 싫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게 될 수 있다. 황소 앞에 빨간 기를 흔드는 것과 같다.¹⁾

예를 들어 냉전시대의 어떤 조사에서, 어떤 주제를 설명하면서 “공산당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설명을 했다면, 많은 응답자들은 어떤 쪽이든지 공산당이 말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택했을 것이다.

Menefee(1950)는 16개의 사회적인 주제에 대해 742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각각 항목들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했다. 얼마간 시간의 여유를 두고, 똑같은 질문으로 다시 조사를 하였다. 이번에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그 주장을 한 집단이 파시스트, 애국주의자, 공산주의자 유형으로 확인을 시켜주었다. 그 결과 파시즘으로 밝혔을 때 이전에 지지한 응답자들 중 70%, 공산주의자가 지지한 내용을 지지한 응답자 중 60% 이상이 그들의 대답을 그 집단들의 의견과 반대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예를 들어 “김정일, 히틀러, 세종대왕’ 등을 보면 어떤 이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1) 체계적 설문 디자인(systematic questionnaire design), 비엔엠북스, 126쪽

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주제도 이름에 따라서 다른 상승효과로서 작용한다. “재벌”은 비우호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대기업”은 그것보다는 우호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특히 응답자의 기억을 이끌어 내는 질문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어는 특정기억을 되살리는 단서(cue)역할을 하게 되므로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충돌사고를 목격한 응답자들에게 그 장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단어인 smash, collide, hit 각각에 따라서 충돌시 자동차의 추정속도나 현장에서의 목격사항에 대한 응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사고의 경우라도 smash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속도는 더욱 빨랐다고 기억을 되살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 충돌과 관련해 그 충돌 묘사에 사용한 용어가 다름에 따라 응답자가 추정된 사고 차량의 속도에 차이를 보인 예(미국 대학생의 경우)²⁾

사용한 단어	평균 추정 속도(mph)
smashed	40.8
collided	39.3
bumped	38.1
hit	34.0
contacted	31.8

6) 고정관념효과(stereotypes)와 관련하여 최근의 ‘R’사의 조사와 여론조사공정의 조사를 비교해보면, 질문이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조국사태에 대한 검찰조사’라는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어의 선정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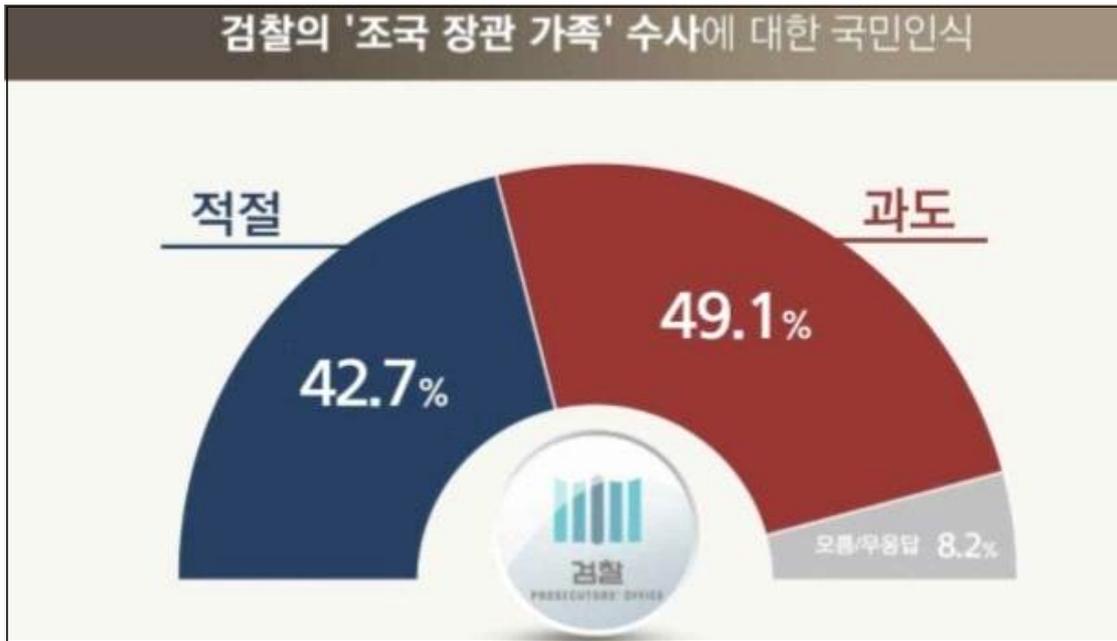
‘R’사가 9.24일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한편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결과는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1%로 나타나, ‘적절하다’고 응답한 42.7%보다 6.4%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조사기관들이 조국장관 ‘임명반대’ 비율이 높고, 나아가 ‘장관사퇴’도 높게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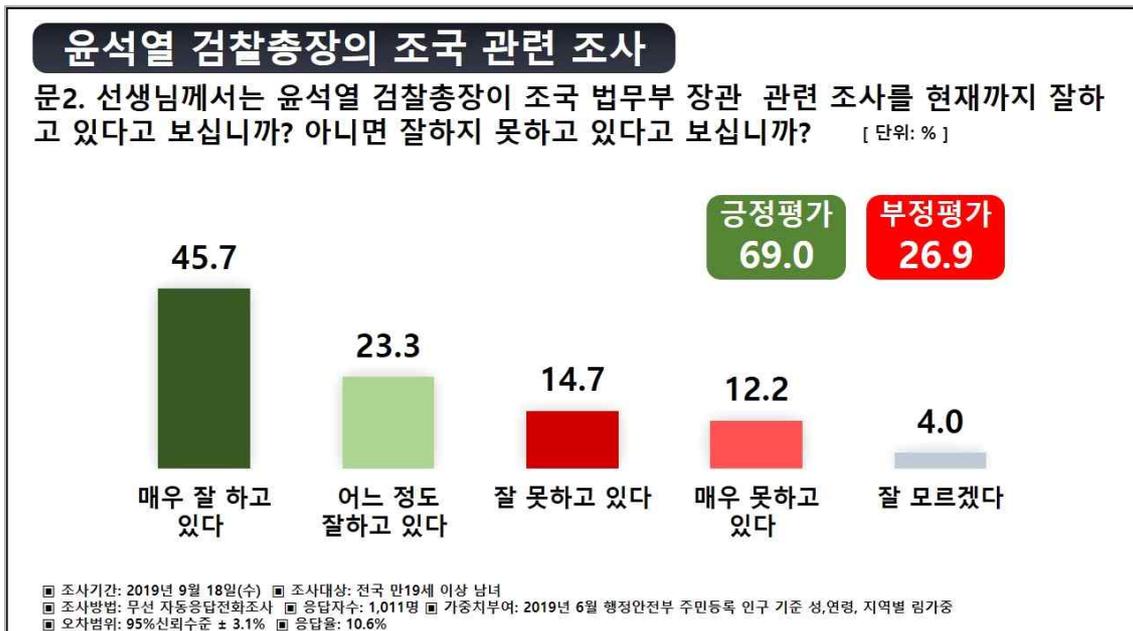
그것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갖는 고정관념효과(stereotypes)가 조사에 영향을 미쳤고

2) Loftus, Elizabeth F. & John C. Palmer.(1974), “Reconstruction of Automobile Destruction: An Example of the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and Memory,”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3(5), 585-589

동정심을 자극하였다고 봐야할 것이다.



여론조사공정이 9.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선생님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조사를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9%,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6.9%로 나타났다.



‘R’의 결과를 보는 국민들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판단하게 되고, 여론조사공정의 결과를 보는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질문에 포함된 ‘가족’이라는 동정적 단어와 선택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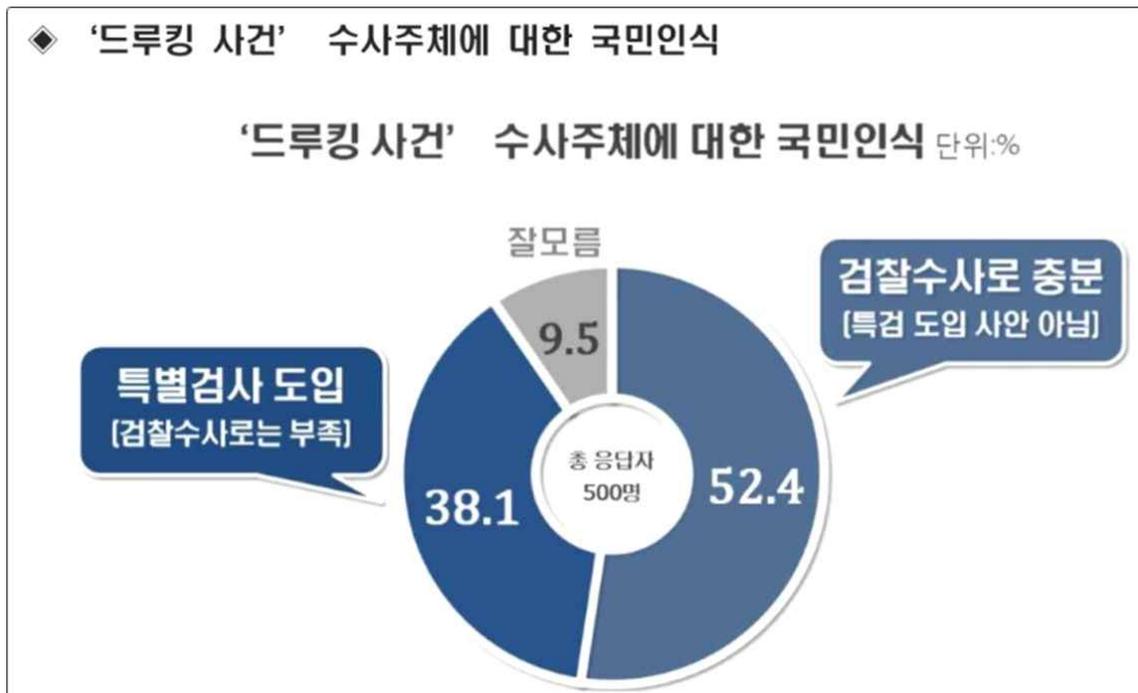
* 결론 : 질문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2. 표본의 수와 결과는 관계가 있는가?

국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최소한 1000표본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2019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개의 매체(오마이뉴스, TBS, CBS) 순차적으로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인 R사에 의뢰한 5.18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표본이 각각 501, 501, 504명으로 통상적 조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18년 4월에는 당시 큰 이슈였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 모의하여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있었다.

제일 먼저 2018년 4월 22일 'R'사는 표본 500으로 조사한 결과 드루킹 특검반대가 52.4%, 특검찬성이 38.1%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조사를 근거로 특검 반대 입장을 주장하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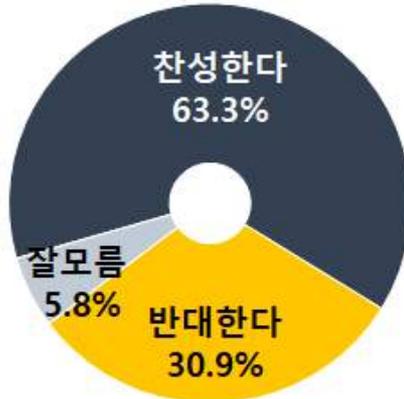
▶ 2018년 4월 22일 'R'사의 표본 500 조사한 드루킹 특검 여부 결과

그러나 여론조사공정이 2018.4.20~4.22(3일간) 표본 1037명으로 조사한 결과는 특검 찬성이 63.3%, 반대가 30.9%로 나타났고,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조사를 근거로 단식을 하며 특검을 주장하였다.

드루킹 사건 특검 실시 찬반 여부

문1. 최근 민주당 당원 5명이 정부비판 댓글을 쓰고 추천수를 조작할 뿐만 아니라 김경수 의원을 통해 청와대에 인사 청탁까지 요구한 일명 "드루킹 사건"이 정치적으로 정점화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과 외압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단위: %]



■ 조사기간: 2018년 4월 20일(금), 2018년 4월 21일(토), 2018년 4월 22일(일)
 ■ 조사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 조사방법: 유무선 ARS전화조사 ■ 응답자수: 1,037명
 ■ 가중치부여: 2018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필가중(Rim Weight)
 ■ 오차범위: 95%신뢰수준 ± 3.0% ■ 응답률: 6.7% ■ 조사수행기관: 여론조사 공정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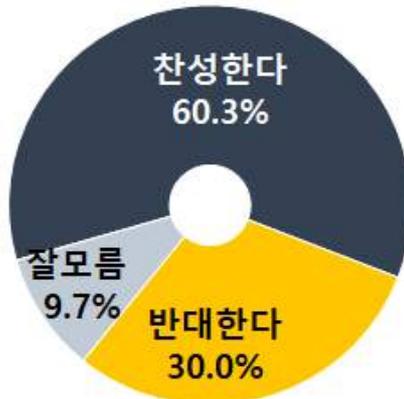


여론조사공정은 4일 뒤인 4.26~27에도 더 많은 표본인 1502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드루킹 사건 특검 실시 찬반 여부

문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해 특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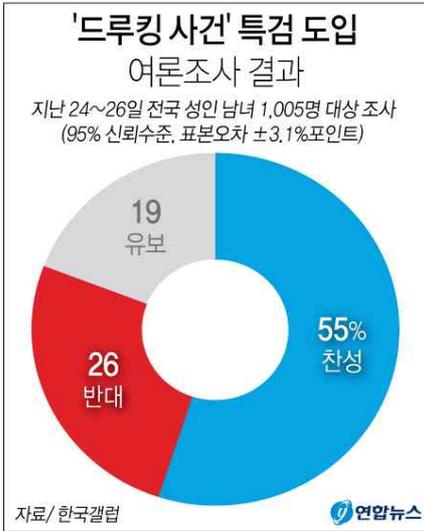
[단위: %]



■ 조사기간: 2018년 4월 26일(목), 2018년 4월 27일(금)
 ■ 조사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 조사방법: 유무선 ARS전화조사 ■ 응답자수: 1,502명
 ■ 가중치부여: 2018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필가중(Rim Weight)
 ■ 오차범위: 95%신뢰수준 ± 2.5% ■ 조사수행기관: 여론조사 공정위



이후 한국갤럽이 4.24~26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특검찬성이 55%, 반대가 26%로 나타나 'R'사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사기관	샘플 수
'R'사	500
공정(1차)	1037
공정(2차)	1502
한국갤럽	1005
리서치뷰	1000

▶ 여론조사기관별 드루킹 특검관련 조사 표본 수 비교

선거조사의 경우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보면 전국 단위의 선거조사의 경우 표본이 1천명 이상이어야 공표·보도할 수 있으며, 광역단체장선거나 시·도 단위 조사는 800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나 자치구 시·군 단위 조사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 결론 : 일반적으로 샘플수가 많을수록 결과의 정확도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3. 응답률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안철수는 응답률 1%미만의 선거여론조사를 문제 삼기도 하였고, 홍준표는 미국에선 응답률 30%미만은 공표를 금지한다고 하는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면서 응답률이 최소한 10%가 되지 않으면 이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시 응답률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인 미국 여론조사 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AAPOR) 홈페이지에서도 응답률은 여론조사 공표시 권고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응답률이 마치 중요한 척도인 것처럼 여기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샘플의 표집방식을 중요하게 본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신뢰도와 응답률이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갈수록 낮아지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전 세계 여론조사 기관들의 고민거리인 점은 사실이다. 여론조사는 일정 인원 이상에게 무조건 답변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응답률에 해당하는 협조율은 ▲1997년 43% ▲2000년 40% ▲2003년 34% ▲

2006년 31% ▲2009년 21% ▲2012년 14% 등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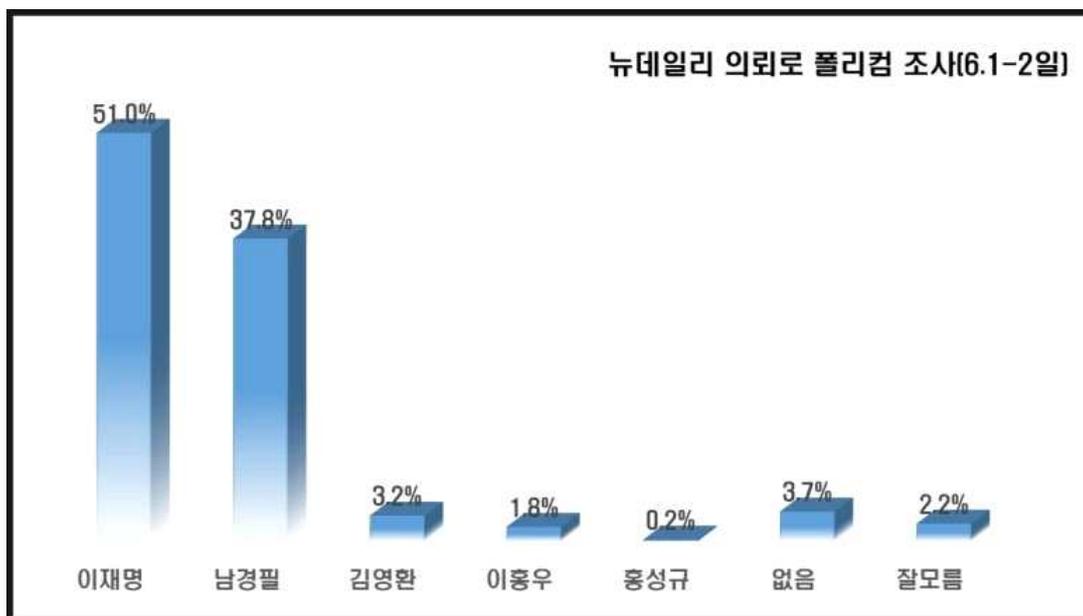
예를들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2018년 6.13지방선거 경기도선거조사 결과를 보자.

1) 먼저 '뉴시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2018. 5.28~29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률은 2.9%였다. 1위는 53.8%의 이재명, 2위는 30.6%의 남경필이었다.



▶2018. 5.28~29일 리서치뷰가 조사한 경기도지사 선거(응답률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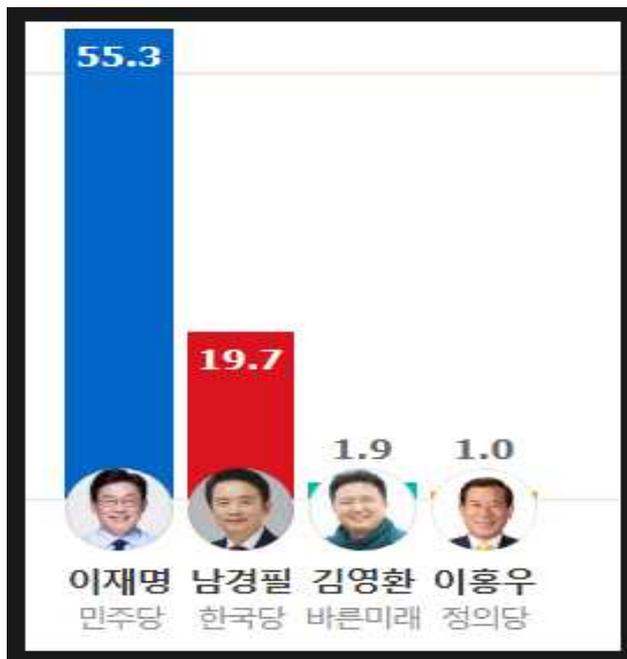
2) 뉴데일리의 의뢰를 받아 폴리컴이 6.1~2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률이 0.9%이다.



3) 노컷뉴스 2018.4.25. <https://www.nocutnews.co.kr/news/4959949>

응답률 2.9%의 리서치뷰의 조사와 비교해 보면 1,2,3위가 변동이 없다. 각각의 약간의 지지율 차이는 조사 일시, 이슈의 등장 여부 등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응답률이 17.3%인 한국리서치 조사(KBS 의뢰, 5월25~26일, 800샘플)를 보면, 역시 순위에 변동이 없다. 이재명은 세 조사에서 모두 50%를 상회하며 1위를 하고 있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



▶ 응답률이 17.3%인 한국리서치 조사(KBS 의뢰, 5월25~26일, 800샘플)

*결론: 응답률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표본의 대표성이다.

4. 선택지와 결과(대통령지지도를 중심으로)

대통령지지도 또는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결과가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사 목적이 같지만 질문 유형과 선택지가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h3>한국갤럽</h3> <p>문 1) ○○님께서서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3, 9인 경우 :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 중 어느 쪽입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잘하고 있다 2. 잘못하고 있다 3. 어느 쪽도 아니다 9. 모르겠다 <p>문 3)으로 갈 것</p>	<h3>여론조사공정</h3> <p>[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p> <p>문4.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잘하고 있다 ② 보통이다 ③ 잘못하고 있다 ④ 잘 모르겠다 						
<h3>리서치뷰</h3> <p>11. 귀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번. 매우 잘함 ②번. 다소 잘함 ③번. 다소 잘못함 ④번. 매우 잘못함 ⑤번. 모름/기타 	<h3>리얼미터</h3> <p>◆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p> <p>문2. 선생님께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기 A순, B순 배열)</p> <p>▶ A순</p> <table> <tr> <td>01번. 매우 잘하고 있다</td> <td>02번. 잘하는 편이다</td> </tr> <tr> <td>03번. 잘못하는 편이다</td> <td>04번. 매우 잘못하고 있다</td> </tr> <tr> <td>05번. 잘 모르겠다</td> <td></td> </tr> </table>	01번. 매우 잘하고 있다	02번. 잘하는 편이다	03번. 잘못하는 편이다	04번. 매우 잘못하고 있다	05번. 잘 모르겠다	
01번. 매우 잘하고 있다	02번. 잘하는 편이다						
03번. 잘못하는 편이다	04번. 매우 잘못하고 있다						
05번. 잘 모르겠다							

▶ 4개 조사기관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질문지 비교

또한 선택지에 표현된 어휘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5지선다형으로 조사하는 3업체 질문지 비교

리얼미터	리서치뷰	디오피니언
매우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한다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다소 잘한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잘못하는 편이다	다소 잘못한다	대체로 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한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 3개 업체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선택지 비교(1)

4지선다형으로 조사하는 3업체 질문지 비교

한국갤럽	여론조사공정	조원씨앤아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잘못하고 있다
어느 쪽도 아니다	잘못하고 있다	어느 쪽도 아니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 3개 업체의 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에 대한 선택지 비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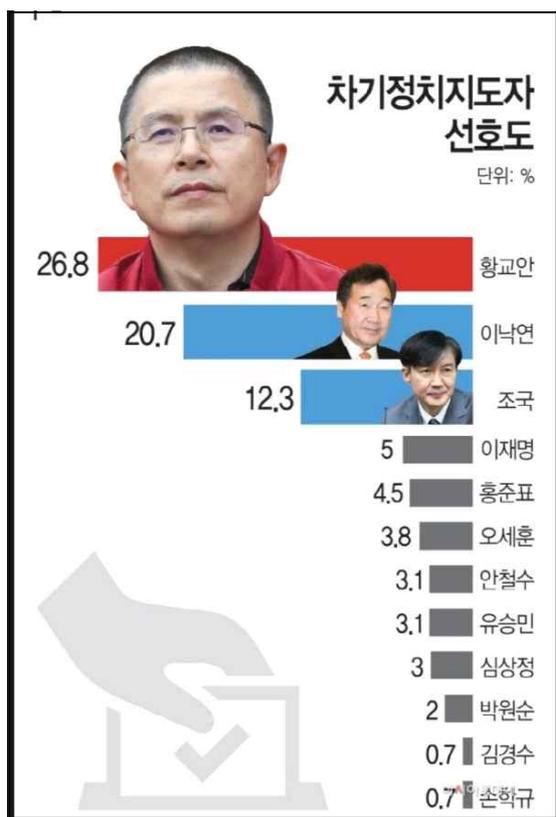
* 결론 : 조사기관 마다 같은 목적의 조사이지만, 질문의 형태와, 선택지의 수, 표현된 어휘의 차이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단순 비교하여, 일방적으로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5. 노출 효과(露出效果, Exposure Effect)와 조사시기

2019년 9월11일 칸타코리아가 SBS의 의뢰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내일 당장 대통령 선고를 한다면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 조사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15.9%로 1위, 황교안 대표가 14.4%로 2위, 조국 장관이 7%로 3위를 차지 하였다.



열흘 뒤인 9월 20~21일 알앤씨치의 조사를 보면 1위 황교안 26.8%, 2위 이낙연 20.7%, 3위 조국 12.3%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괄목할만한 두각을 보이지 않던 황교안과 조국이 1위와 3위를 차지한 것은 바로 ‘노출 효과(Exposure Effect)’ 때문이다.



‘노출’은 순간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지층을 형성한다. 황교안 대표가 단숨에 지지를 얻은 것은 조사 4일 전인 9월 16일 단행한 삭발로 인하여 언론 노출 빈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조국 역시 기존의 다른 대권 예상 후보들을 누르고 3위에 랭크될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의혹보도로 인하여 언론의 주요 면들을 차지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 22~23일 양일간 뉴데일리, 미디어워치, 가로세로연구소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총리의 순위가 뒤바뀐 결과를 볼 수 있다.



황교안의 ‘삭발’ 효과가 가라앉으면서 약 20일 전인 9월11일 칸타코리아가 조사한 결과 수준으로 회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남북대화과 같은 반짝 이벤트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과 같다. 대통령에 대한 노출효과와 밴드왜건효과(Band wagon effect)가 시너지를 이루기 때문이다.

* 결론: 동일한 조사라 할지라도 조사 시점이 언제인가와 조사 시기에 어떤 이슈들이 등장했었는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여 비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나가는 말

여론조사 업체는 순수 민간기업으로서 그 수를 다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략 200~300 업체로 추정되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선거여론 조사 가능 업체는 80개이다(2019.09.28. 기준)

선거관련조사는 여심위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조사 건당 벌금을 최소1000~30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역대가 넘는 벌금을 받고 취소된 업체도 있다. 2018~2019년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4개이다.(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유형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치내역								
	합계	고발	수사의뢰	과태료	경고	시정명령	정정보도 문	준수촉구	기타
계	318	29	5	14	139	3	0	127	1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37	11	1	0	16	1	0	8	0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7	1	0	0	12	0	0	14	0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70	1	1	3	28	0	0	37	0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40	0	0	0	17	2	0	21	0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사실과 다르게 등록 포함)	77	0	0	8	36	0	0	33	0
거짓·중복응답지시·권유·유도	21	13	1	0	7	0	0	0	0
후보자등 실시조사결과 공표·보도	17	3	2	0	9	0	0	3	0
기타	29	0	0	3	14	0	0	11	1

▲여심위의 심의 조치 세부 내역(출처:여심위)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단순히 여론조사업체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과 다른 결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 조사결과에 대한 아전인수(我田引水)적 해석, 결과를 보도하는 언론매체 편향된 보도, 응답자의 불성실한 참여 등 복합적인 문제이다. 무조건적 여론조사 만능주의도 문제지만, 무조건적 여론조사 불신주의도 탈피해야할 당면 과제이다.

공영매체들 여론조사의 부적절성과 정치적 편향성

이 석 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 동국대 객원교수

1. 공영매체들의 정치 여론조사 현황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 기준
(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등록 의무화)

- 정치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공영 매체 : tbs, YTN
- 종종 하고 있는 공영 매체 : KBS, MBC
- 거의 안하는 매체 : EBS, 연합뉴스(TV), 서울신문

- * 하면 위법인데 그 마저 편향되게 하는 매체 : tbs
- * 과잉 편향되게 하는 매체 : YTN
- * 편향되게 하는 매체 : KBS, (MBC)

2. tbs 교통방송과 YTN의 여론조사 실시 현황

- 매주 1~2회씩 전국 단위의 정치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다수 언론들이 이를 인용해 보도하고 있는 상황.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이 시작된 2014년 4월 이후 기록 등에 근거할 때, tbs는 이전 정권까지는 정치 여론조사가 없었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선 2017년부터 시작했고, YTN은 이전 정권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두달 정도 하다가 중단한 것을 문재인 정권 들어와 2018년 11월부터 재개, 현재까지 10개월여 지속중.

3. 여론조사업계의 증언들

‘일부 공영매체의 여론조사기관 선정 입찰에는 특정 기관이 내정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정 기관을 이면 선정하는 조건으로 설문 문항 등을 조정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음.

4. 교통방송의 성격

- 서울시 소속 사업소로 시장 직속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지도감독을 받음. 원래 행정 1부시장 산하 도시교통실의 지도감독을 받다가 2019년 7월 소관이 변경. 서울시가 교통방송을 정치적으로 편법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표면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방송법상의 사업내용은 ‘전문분야(교통,기상)를 60% 이상 편성해야 하고 나머지도 교양과 오락으로만 채워야 한다.’

5. YTN의 성격과 정치 여론조사 과잉

- 대주주: 한전KDN, 한국인삼공사, 한국마사회 (모두 공기업, 공공기관)
- 2019년 1분기 영업이익 65억원 적자로 2018년에 이어 적자 지속. 매출액은 257억 원 전년대비 5.1% 감소.
- 경영난 속에서도 정치 여론조사는 오히려 확대한다는 것은 과잉이자 정치적 오해의 소지.

6. tbs 정치 여론조사의 위법성

- 2017년 7월 26일(발표일 기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두달여 후) 여론조사기관 ‘레알미터’에 ‘전국 정례조사 7월 4주 주중 집계’란 이름의 정치 여론조사를 매주 1~2회씩 의뢰하기 시작해 2019년 9월 25일 현재 계속 진행중으로 그동안 총 193회 실시.
-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왜 하는가?
- 법상 정치중립이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당지지도 조사를 왜 하는가? 대통령 지지도 조사도 왜 매주 하는가?
- 방송법 위반은 명백하고, 지도감독 행정기관인 서울시의 헌법상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선거법 위반을 포괄적으로 적용 검토할 수 있음.

7. tbs의 운영예산은 대부분 세금

- 서울시 교통사업 특별예산으로 지원받는 일반전입금이 2019년 357억원으로 2018년 316억원에서 15% 증액.
- 서울시 지원액이 전체 세입의 83.1%이고 광고 및 협찬유치를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수입은 전체 세입의 16.9%에 불과.
- 2019.7.1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의결. 이후 2019년 9월초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단으로의 변경허가 신청.
- 사업내용은 교통·생활 정보,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 해외방송 교류 등.
-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를 포함 11명 이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둘 수 있음.

8. tbs 예산이 시민의 혈세 투입인 이유

(비효율)

-낮은 시청률과 인지도, 그리고 스마트폰, 뉴미디어 등으로 교통방송은 물론이고 지상파 TV와 라디오 광고시장이 크게 축소되는 중인데 예산 지원은 해마다 증대되고 아예 재단이 되면 엄청난 출연금 지원 결과가 됨.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재단설립의 경제적 효과(B/C분석) 결과는 0.52로 1보다 작아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산하 5개 재단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는 매년 하락. 그럼에도 서울시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시정명령 및 이행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 보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란 명분은 말은 그럴 듯 한데, 이미 민간 분야에서도 누구나 유튜브 등 급속도의 창의적 미디어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

-재단 설립 이후에도 서울시로부터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는 어려움.

-결국 재단 남설 및 방만 운영, 그리고 정치중립 위배라는 복합적인 부적절성 및 법위반의 문제가 지속될 것임.

9. tbs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혈세 낭비 위반 실상

(2019.09.26. 조선일보 사설)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교통방송이 '나는 꿈수다' 멤버 주진우씨에게 새 프로그램을 맡겼다고 한다. 지금도 교통방송에선 '나꿈수' 출신 김어준씨를 비롯해 이석기 전 의원 석방운동을 펼쳤던 사람, 광우병 파동 때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겠다"고 했던 텔런트 등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외부 인사가 진행하는 총 9개 프로그램 중 7개의 진행자가 이런 인물들이다. 교통방송은 주씨가 '정통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음악은 양념이고 정권 옹호 소리가 넘칠 것이다. 김어준씨 하루 출연료가 100만원 정도다. 시민 세금으로 한 달 수천만원씩 김씨에게 주는 셈이다. 교통방송 사장은 KBS PD 출신으로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맡아 2012년 공영방송 총파업을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PD 시절 베네수엘라를 오늘의 지옥으로 만든 차베스를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모아놓았다.”

10. 김어준의 tbs 라디오 출연료와 여론조사 비용

-김어준 출연료: 연간 2억6천만원 (주 5회 연간 260회 방송 × 회당 백만원)”

-여론조사 비용: 연간 1억원 가량으로 업계는 추정.

-서울시민의 혈세를 왜 특정 정치 성향 인물들(7명)에게, 그리고 정치성 사업에 투여하는가?

11. 공영매체들 여론조사 정치적 의도성과 내용상의 문제

<tbs>

가) 정기 조사(주 1~2회) 3년째

: '정치권 정당에 대한 정기 지지도 조사' (방송법, 정치중립성 등 위반)

나) 정치 의도성이 담긴 수시 단독 조사 (선거법 위반 소지 추가)

○ 2017.08.29. '여야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 결과는 현 시장 박원순 1위 --> 사실상의 선거운동

○ 2017.10.25. '정당간 통합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

○ 2017.12.28. '주요 정국현안(주요정당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 2018.05.30.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각 정당 후보 지지도 조사'

: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위

○ 2018.06.06.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계획 조사'

: 2만명에게 전화해서 질문 내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6월 8일과 9일이 사전투표일이나, 6월 13일 본 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들 투표일 중에서 선생님께서 언제 투표할 가능성이 큼니까?"

그 당시 특별히 서울시민들 간에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유독 높아진 상황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통방송은 정당 선거에 관여하는 곳이 아님.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지리멸렬한 상태여서 투표율이 높아져야 여당 당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런 여론조사 한 것 아닌가?

그 결과인지 사전투표율이 2014년 11.5%였던 것이 20.1%로 급증.

○ 2018.06.07. '인천,경기,서울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 조사를 왜 하는가?

○ 2018.8.1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

: 정치권인 정당의 당대표 선거를 왜 조사하는가?

다) 정치적 의도성이 의심되는 공동 여론조사

- 2019.9.11. 갑자기 ytn과 함께 '대통령 지지율 일일 조사'를 실시.

- 다음날 9/12일(목)은 추석연휴 시작날.

- 조사 결과는 "9.9일 조국 임명후에도 문 대통령 지지도는 오히려 (조금) 올랐다"는 내용.

- 교통방송이 이런 정치성 짙은 조사를 왜 수시로 하는가?

<KBS>

가) 2019.9.11. '한국리서치 추석 특집 여론조사'

(9월10-11일 연휴시작 직전 이틀 조사)

여론조사와 민심의 괴리, 신뢰 위기의 여론조사

(설문지)

「KBS-한국리서치」 추석 특집 여론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____입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02-3014-1000번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협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응답자 선정 질문]
선문1. 지역 :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첫 질문)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잘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묻은 뒤

(질문 2-1) 잘했다고 말한 가장 큰 이유는?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의혹이 해소됐거나 가짜뉴스라고 생각해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해서’

--> 잘한 이유를 먼저 자세히, 긍정적으로 설명

(질문 2-2) 잘못했다고 말한 가장 큰 이유는?

‘가족문제를 포함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앞서와 같은 친절한 이유 설명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친 정권 시각의 질문+유도성 표현 무사용)

문2-1. (문1의 1,2 응답자만) 잘했다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보기 Rotation)
1. 검찰개혁 추진의 책임자라서 -> 문3
2.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의혹이 해소됐거나 가짜뉴스라고 생각해서 -> 문3
3.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 문3
4.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서 -> 문3
9. 모름/무응답 -> 문3
문2-2. (문1의 3,4응답자만)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보기 Rotation)
1. 검찰개혁 추진의 책임자가 아니라서
2. 가족 문제를 포함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3.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4.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9. 모름/무응답

=> 전체적으로 최대한 임명 잘했다는 답이 나오도록 설문 구성 및 작성.

[국정운영 평가] 항목으로 가서는,
(질문 8) 대통령 취임후 국정 평가

1. 매우 잘하였다
2. 대체로 잘하였다
3. 별로 못하였다
4. 전혀 못하였다

--> 표현의 등가성 왜곡

즉 잘하였다에 대한 평가어는 '좀더 쉽게 답할 수 있게' 등급을 낮추고,
못하였다는 평가어는 '답하기 어렵게' 표현의 등급을 올렸다.

즉, 매우 < 전혀, 대체로 < 별로

문8.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하였다
2. 대체로 잘하였다
3. 별로 못하였다
4. 전혀 못하였다
9. 모름/무응답

(질문 9)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에 가장 잘한 분야는?”

그런데, “주요정책들 가운데 가장 못한 분야는?” 이게 없다.

=> 균등성, 객관성의 결여

즉, 가장 잘한 것만 답하라고 하면 못한 게 거의 대부분이어서 답을 할 수가 없다.

문9.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 가운데 가장 잘한 분야는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보기 Rotation)

1. 적폐청산 및 정치개혁
2. 재벌개혁 및 경제 민주화
3. 일자리 마련
4.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
5.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6.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정책
7.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정책
8.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9. 모름/무응답

분야별 질문의 큰 2~3가지는 안보(대북) > 경제 > (개혁)

==> 안보는 아예 묻지 않고 거꾸로 개혁(질문10)을 먼저 물은뒤 경제(질문11) 묻고 끝냄.

나) 2019.08.14. ‘한국리서치 8.15 특집 여론조사’

(2019.08.14. 20시 결과 발표)

[정부의 대일정책 평가]

이 분야를 위 국정 운영 평가 보다 앞서서 자세히 장황하게 물었다. 안보와 경제, 조국 파문을 약화시키려는 의도.

질문은,

“일본의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이라고 시작, 즉 반일여론 고조로 시작.

[정부 대일 정책 평가]

문7.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 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하였다
2. 잘 하였다
3. 못 하였다
4. 매우 못 하였다
9. 모름/무응답

문8.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지속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한국
2. 일본
3. 양국 모두 다 손해
4. 양국 모두 다 손해 없음
9. 모름/무응답

이어 일본의 의도가 뭐냐는 항목들만(상대적 질문은 없이) 나열해 답변을 요구

문9.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의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1-3 Rotation)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 겠다
1)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1	2	3	4	9
2)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개헌 추진을 위해서다	1	2	3	4	9
3)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경제적 추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1	2	3	4	9

일반 국민들은 전문적으로 알 수도 없는 질문들을 죽 늘어놓으면서 무작정 반일로 유도함.

즉 ‘수출규제는 누가 더 손해냐’ ‘지소미아 연장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화이트와 지소미아는 어느 쪽이 더 손해냐’ 란 질문들.

정부 최고 전문 당국자가 아니면 웬만한 전문가도 분석이 어려운 질문을 그냥 앞선 질문의 분위기에 따라 답하도록 늘어 놓아.

공영방송이 국가 중대사를 단순 여론 물리로 무책임하게 물고가는 모습.

12. 결론

공영매체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조사를 과잉 실시하는 것은 국민여론의 왜곡을 통해 국가를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해 또는 기득권 유지 차원으로 끌고가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함이고 그것이 국민 분열과 국가 위기로 닥치고 있다는 점에서 묵과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공영매체 tbs와 YTN이 독립적 재정의 제한 상황에서도 매주 1회 또는 2회씩이나 여론조사를 2~3년째 거듭해 오고 있다는 것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성, 그 배후 역할 외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실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이나 정권의 다른 의도된 정책 강행 때 마다 여론을 거론하

고 그 근거가 바로 이들 편향된 공영매체 여론조사 결과들이다.

국민 여론을 진실이 아닌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다.

현 정권의 대내외 주요 국가 정책이 번번이 좌초하고 위기를 불러 오고 있는 점이 그 역설적인 답이다.

교통방송이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특정 정파·친정권 인사 일색의 출연진 전면 교체와 위법적인 정치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 한, 그리고 역시 국민 혈세 낭비임이 입증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역시 이런 지적의 사실성을 더욱 강화해 주는 것이자 국가 위기의 강화이다.

승인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신청을 불허 또는 반려하지 않는다면, 또한 KBS가 친정권 편향적 여론조사를 시정하지 않는 한 그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국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시정과 함께 처벌에 나서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매의 눈, 또는 행동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심판할 수 밖에 없다. (끝)

